

(...8페이지에 이어) 다. 검사들의 업무 환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탁상공론식 개편안이며 검사들의 시간만 낭비하게 한다는 것이다. 개편안이 대부분 그동안 민변이 주장해온 내용이라는 점도 검사들을 자극했다.

법무부 검찰과장은 "검찰 구성원들께 우려 드린 점 송구하다"고 공개 사과했다. 추장관의 검찰 길들이기를 보좌해온 최측근이 사과해야 할

정도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권력 수사를 진행 중이던 검찰 지휘부를 공중분해시키는 학살 인사를 한 데 이어 얼마 전에는 권력 수사를 지연시키고 몽개는 데 공을 세운 검사들을 승진시켜 요직에 앉히는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두 번이나 휘두르는가 하

면,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검·언 유착' 의혹 속에 무리하게 엮어 넣으려다 실패하는 망신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런 일들이 거듭되면서 검찰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구성원들은 심한 자괴감에 빠져 있다. 검사들의 자긍심을 짓밟는 직제개편안까지 들이밀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반발을 부른 것이다.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추 장관의 착각과 무리수가 자초한 일이다.

"전재산 53억 내놓으셔야죠"

손혜원에게 돌아온 손혜원의 말



"투기 사실이면 목숨과 전 재산 내놓겠다" 공인 손혜원 2018년 신고액 53억원

'목포 투기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은 여러 차례 '재산'을 걸었다.

"저 손혜원은 '손혜원 목포 투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데에 제 인생과 전재산은 물론, 의원직을 걸겠습니다.'"(2019년 1월 17일 페이스북)

"목포에 차명 제 건물이 확인되면 저는 전재산을 내놓을 것입니다. 처음 약속대로" (2019년 4월 4일 페이스북)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습니다." (2019년 6월 18일 페이스북)

"제가 처음부터 말했죠. 제가 차명으로 구입한 목포 부동산이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전재산을 기부하겠다고요. 그 약속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올해 2월 10일 페이스북)

◇ 아권·네티즌 "재산 어떻게 처분할 거냐"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목포 불법 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작년 1월 이후 그가 시중 일관 혐의를 부인하면서 했던 발언들이 주목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차명·투기 등이) 사실이라면 전 재산을 내놓겠다"는 손 전 의원 발언을 부각하면서 "재산을 어떻게 내놓을 건가" "유죄가 나왔으니 이제 다른 핑계를 댈 건가"라고 했다.

일각에선 50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손 전 의원 재산을 언급하기도 했다. 손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8년 공개된 재산에서 53억4848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재산 총액 10억3870만원, 건물 재산 총액 18억1032만원, 골동품 28억1800만원 등이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목숨 걸겠다" 차명 부동산 밝혀지면 전

재산 기부하겠다고던 손혜원 1심 유죄, 이번엔 뭐하고 할까?"라며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니, 이제는 또 무슨 말로 돌려달까"라고 했다.

◇ 아권·언론 비판하며 시종 일관 혐의 부인

손 전 의원은 작년 1월 의혹이 최초로 불거진 뒤 일관되게 투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산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겠다고도 했다. 작년 1월 15일 "목포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만 돌아오는 것은 결국"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언론 인터뷰에서는 "투기가 아니라는 데 의원직이 아니라 목숨을 걸겠다"고도 했다.

손 전 의원은 특히 그해 1월 23일에는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궁금해하시는 모든 질문에 대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00분간 이어진 기자회견 불리한 질문에는 "검찰 조사 받을 때 알려주겠다" "지겨워서 말 못하겠다"고 답변을 피하기도 했다.

손 전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이해 충돌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과 관련해 "평생을 살면서 제가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 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질문이 이어지자 "그 이야기는 그만하겠다"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는 지겨워서 더 못 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손 전 의원에게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며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손 전 의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해 4월 4일에는 페이스북에 "목포에 차명 제 건물이 확인되면 저는 전 재산을 내놓을 것입니다. 처음 약속대로" "목포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저는 의원직을 사퇴할 것입니다. 처음 약속대로"라고 썼다.

◇ 검찰 수사에는 "그림 처음부터 그려져, 영성하게 판짜"

검찰은 손 전 의원을 같은해 6월 18일 재판에 넘겼다.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이다. 손 전 의원은 "저를 기소한다는 그림이 처음부터 그려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영성하게

'목포 투기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판을 짚을까요"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그때도 "재판을 통해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올해 1월에는 창성장이 있는 목포의 국회의원 총선 관련 내용을 포스팅하며 "저는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라고 썼다. 또 "어디를 파헤쳐도 제가 지은 죄를 찾지 못하니 운동 보좌관 남편, 보좌관 친구, 보좌관 딸, 보좌관 녹취, 보좌관 카톡... 지루하고 지겹네요"라고 했다.

손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여섯 번째 공판이 열린 다음날인 올해 2월 10일 "언제나 그랬듯 별 의미 없는 증인들과 증언을 끼워맞추려 애쓰시는 검사님들, 사진 몇 장뿐 이제 기사조차 없는 김빠진 제 재판"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부터 말했죠. 제가 차명으로 구입한 목포 부동산이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전재산을 기부하겠다고요"라며 "그 약속은 영원히 유효하다"고 썼다.

유죄 선고받은 손혜원, 방송 나가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하죠"

선고 후 라디오·유튜브 잇달아 출연

아권선 "반성 없는 오만함의 끝"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12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당일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 잇달아 출연해 "(재판 결과가) 억울 정도가 아니라 어이가 없죠"라고 말했다. 야권에선 "법정 구속을 가까스로 면한 손 전 의원의 오만함"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1심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1심 판결이 오후 2시 30분쯤 선고된 것을 감안하면 불과 3시간 만이다. 손



(previous Killarney Dental Clinic owner)

한인 치과의사 산리 Sean Lee

Tel: 403-228-5367 / Fax: 403-229-2876

website: www.sldentalcentre.ca

email: mission@sldentalcentre.ca

SL DENTAL CENTRE: 1000 Mission Professional Bldg
2303 4th Street SW, Calgary, Alberta T2S 2S7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고 살 날



한때 캐나다 밴쿠버의 집값이 1년 새 30% 넘게 폭등했다. 세계 부동산 거품 위험 지수에서 런던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그 뒤에 중국인 큰손들이 있었다. 그해 밴쿠버 주택 거래액의 3분의 1을 중국인 부자들이 싹쓸이하면서 '미친 집값'을 만들었다. 급기야 주 정부가 밴쿠버 일대에 집을 사는 외국인에게 15%의 취득세를 신설하고, 집 산 뒤 안 살면 '빈집세'까지 매겼다. 영국 런던,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린 것도 중국인 큰손들이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시위에서 '역차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자국민을 대우하는 미국 부동산 정책을 규탄한다"는 시위대 기자회견도 열렸다. 우리 국민에게는 은행 대출 물꼬를 조이고 세금 폭탄을 때리면서도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

제로 외국인이 자국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국내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가족 파악이 어려워 다주택 규제도 힘들다. 다른 가족 명의로 사면 알아낼 방법이 없다.

▶30대 중국인이 출처 불명의 자금으로 전국 아파트 8채를 사들여 고액 월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 조사를 받기도 했다. '갭 투자'로 아파트 40여채를 싹쓸이한 미국인도 있다. 지난 3년여 사이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는 2만3000여채에 이른다. 금액으로는 7조6000억원이다. 우리 국민이 규제에 손발 묶여 있는 사이 외국인은 마음대로 국내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부 외국인의 투기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밴쿠버·런던에 '미친 집값'을 몰고

온 중국 부자들의 고가 부동산 쇼핑과는 거리가 있다. 외국인이 산 아파트 10건 중 6건꼴로 중국인이 샀다. 중국인의 평균 아파트 구입가는 2억3300만원으로, 미국·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 산 평균가(5억원)의 절반이 채 안 된다. 조선족·중국인이 모여 사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을 주로 샀기 때문이다. 투자 못지않게 실수요도 많다는 뜻이다.

▶외국인 취득세를 높인 싱가포르·홍콩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집 살 때 내·외국인 차별이 없다. 정부가 대출을 옥죄고 세금 방망이를 휘두르며 이중·삼중으로 괴롭히니, 규제 없이 맘 편히 집 살 수 있는 외국인한테까지 원성이 돌아가는 것이다. 시위 현장에서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고 살날 말이나"는 구호가 등장했다. 그런 날이 곧 올지도 모르겠다.



전 의원은 "판사는 제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을 하죠"라고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전남 목포시의 도시 사업 계획을 미리 입수해 차명(借名)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改後·뒤우침)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방어진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하지

는 않았다. 손 전 의원은 법정 구속을 면한 뒤 라디오에서 "(판사가) 이 상황을 이해하시는 것이 어려우시구나"라며 "굉장히 정확하고 상세한 변론 자료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검사들이 주장하는 바만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또 "저를

이해하지 못하면 되게 복잡한 사안이거든요. 저를 알면 쉬운 사안인데"라며 "이분(판사)이 이 사안을 다 이해를 하고 판결을 내리실까라는 걱정은 했었다"고 했다.

손 전 의원은 검찰 기소에 대해선 "제가 미운털이 많이 박혀 있는 거 아닌가. 미워가 지고"라고도 했다. 손 전 의원은 같은 날 저녁엔 유튜브 채널 '빨간아재'에 나와서도 재판 결과에 승복하느냐는 질문에 "절대 할 수 없다. 1심에 나온 내용 다 보셨지만, 우리가 주장한 내용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반성과 죄의식이 전혀없는 오만함의 끝을 본다"며 "권력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인정된 건데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고개 뺏듯이 들고 대드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